

# ‘부양의무제’ 폐지... 방배동 모자 비극사건 재발 막는다

서울시, 2300여 가구 복지수혜 위기가구 4단계로 나눠 모니터링 고립 위험도 높은 어르신 가구에 스마트 복지발굴 3종 시스템 도입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고독사로 사망한 뒤 5개월 만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부양 가족이 있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300여가구가 새롭

게 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관내 모든 위기가

구를 1~4단계로 나누고, 자치구가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1단계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해 관리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모니터링해 보살펴야 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에 여기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아우를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돼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 3종 시스템’(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

기대용 광역컨설팅단’도 4월부터 가동한다. 컨설팅단은 알코올중독으로 생명이 위협하지만 지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발달장애 증상이 있음에도 부모가 장애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같이 담당자가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위반 車 9658대 적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달 2회 이상 중복차량 40%, 3916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오전 서울 하늘이 뿌옇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단속 결과 작년 12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 건수는 총 2만7543건으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 차량은 9658대였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를 단속 횟수별로 살펴보면 최대인 21회는 19대, 11회 이상은 365대, 3회 이상은 2074대, 2회는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였다.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고,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된 5등급 차량의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년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의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 취소 처리를 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DPF 미개발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했던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됐으나, 이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차량 단속은 주요 지점 10개

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한해 DPF 부착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며 “또 조기 폐차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여의도 3.5배’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가능해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0만㎡)의 3.5배인 1014만 여㎡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은 김포·고양·파주·양주 등에 걸친 지역이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제한보호구역 1007만3293㎡가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포시 고촌읍 일대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야당동·광탄면 일대 179만6822㎡, 고양시 식사동 등 9개 동 572만5710㎡,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2000㎡ 등이다.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협의로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로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코로나 선제검사... 감염자 150명 조기발견

서울시, 고위험집단 38만여명 대상

대중교통 종사자 37명(버스 17명, 지하철 20명), 개인·법인 택시 종사자 26명을 포함 총 147명의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됐다.

서울시는 고위험집단 대상 선제검사를 통해 약 150명의 감염자를 조기에 발굴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폭증세를 꺾기 위해 감염 파급력이 큰 물류업, 콜센터, 요양 시설·요양병원, 대중교통, 영유아 긴급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선제검사를 추진해왔다.

이달 13일 기준 총 38만2802명에 대한 고위험집단 선제검사가 이뤄졌으며

시는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을 일시 폐쇄 후 소독하고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 접촉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검사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확진환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환경 검체를 실시해 잔여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어 “물류시설 종사자가 확진된 경우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접촉한 물건을 전량 폐기하고, 요양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환자 분류 후 비확진자를 전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집단 선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별 주기적 샘플링 재검사를 진행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거동제한이나 교대 근무로 수검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노숙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물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7749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 해질 / 17:37

1월 15일 (금) 음력 : 12월 3일

수도권 날씨 1~9 °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7, 동두천 -1/8, 가평 -1/7, 파주 -1/7, 서울 1/9, 양평 -2/9, 수원 2/9, 용인 2/9, 평택 -1/10, 백령도 5/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